"연금 줄어든다" 교원 명퇴 바람

하반기만 광주 201명·전남 341명 신청…교단 '흔들'

공무원연금법 개정 논의에 따라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광주·전남 교원수가 폭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급격한 교원감소로 인한 수업 차질 등 '교단 공동화' 현상도 우려되고 있다. 광주시·전남도 교육청은 교육청 예산 범위 안에서 명퇴 확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명퇴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교원들의 불만도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일 신청자 접수를 마감한 전남도교육청에는 올해 8월 말 명퇴를 신청한 교원수가 초등 215명, 중등 126명 등 341명에 달했다. 이미 2월 말에 191명이 명퇴한 것을 감안하면, 올해 교단을 떠나겠다는 교원수가 532명이나 된다. ▲2005년 23명 ▲2006년 49명 ▲지난해 139명 등에 비하면 4~23배가 급증한 엄청난 숫자다.

도교육청은 2월 말 명퇴자들을 위한 명퇴수당 119억원을 집행했으며, 1차 추경을 통해 73억원을 확보해 두었다. 그러나 8월 말 명퇴 신청자 341명에게 지급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명퇴 교원 1인당 평균 6천만~7천만원의 명퇴수당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130여명선에서 명퇴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라 원로교사, 상위계급의 공무원,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이 많은 공무원 순으로 심사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광주도 사정은 비슷하다. 19일 신청자 접수를 마감한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 초등 108명, 중등 93명 등 201명이 8월 말 명퇴를 신청했다. 집계가 마무리되면 숫자는 더 늘어난다.올해 2월 명퇴자 150명을 합칠 경우 금년 한해만 351명에 이른다. ▲2006년 20명 ▲2007년 91명 등에 비해 4~18배 늘어난 수치다.

시교육청이 최근 실시한 명퇴 신청 희망자 수요조사 때는 초등 282명, 중등 107명 등 389명으로 집계됐으나, 심사를 통해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하는 점 때문에 일부 교원들이 명퇴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8월말 명퇴자를 지난 2월 말과 마찬가지로 150명 선에서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70억~8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올해 900명에 가까운 교원들이 명퇴를 결정하면서, 교단 공동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부족한 교원 자리는 기간제 교사로 채우겠지만, 이에 대한 재원 마련이 또 숙제로 남게 되는 등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의 연금법은 퇴직하기 직전 3년간 봉급의 평균이 수당에 반영됐지만, 개정되는 연금법은 전체 근무기간의 평균을 반영하기 때문에 매월 받는 연금 액수가 확 줄어들게 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6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광주·전남 농민연대가 19일 오후 농협 전남본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비료값 인상 철회와 정부 보조금 부활 등을 주장하고 있다. /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이번엔 농민들 '발끈'

비료값 63% 급등 반발…출하 거부 투쟁 벌이기로

연일 계속되는 유가 급등에 화학비료마저 평균 63% 가량 인상되면서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다음달 9일 각 시·군별로 농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농협 점거농성이나 농산물 출하 거부 투쟁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19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복합비료(20㎏) 한 포대에 1만2천950원에서 69.9% 오른 2만2천원으로, 요소비료는 1만2천400원에서 2만700원(66.9% 인상)으로 오르는 등 화학비료 값이 평균 62.9% 올랐다.

농민들은 "복합비료와 화학비료는 이번 인상 전에도 이미 지난해에 비해 각각 31.5%, 27% 올랐다. 농자재와 면세유 가격도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화학비료 값을 이처럼 올린 것은 농업을 말살하자는 것이다"며 인상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6개 농민단체로 이뤄진 광주·전남 농민연대는 19일 오후 농협 전남지역본부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화학비료 가격 인상 철회와 인상분 차액에 대한 70% 지원을 폐기하고, 정부보조금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양혁 농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정부는 농민들의 원성을 무마하기 위해 비료 값 인상 차액의 70% 지원을 대책이라고 내놨지만 이는 하반기 물량에만 한정한 것으로 비료 값을 계속 올리겠다는 계획이 숨어 있다"며 "한시적인 인상 차액에 대한 지원이 아닌 지난 2005년 폐지된 비료 값 정부보조금 정책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원주 전농 광주전남연맹 의장은 "정부가 수매가를 올려주지 않으면 농민들과 투표를 통해 출하거부 투쟁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화학비료 인상에 대해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인상률은 62.9%지만 인상액 중 정부(30%)·농협(30%)·업체(10%)가 각각 부담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실제 부담하는 비율은 18.8%"라며 "세계 곡물가 상승으로 화학비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화학비료 원료의 국제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비료업계의 비료 값 인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장성군수 '재선거 부정 의혹' 무혐의

미등록 운동원 추가 기소

장성군수 재선거 부정의혹과 관련, 피의자의 진술 번복으로 추가 수사에 나섰던 검찰이 미등록 선거운동원 1명을 추가 기소하고 이청 장성군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오인서)는 지난해 12월 장성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미등록 자원봉사자에게 활동비와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건넨 차모(44)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 유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청 군수와 인척관계인 차씨는 지난해 11~12월 사이 미등록 자원봉사자 A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운 대가로 현금 123만원을 지급한 혐의다.

검찰은 또 '이 군수 캠프로부터 대가성 돈을 받았다'고 자수한 여성 자원봉사자 2명 중 뒤늦게 진술을 번복한 B씨를 상대로 무고 여부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선거운동 대가로 축산업자 이모(37)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기소된 오모(20)씨가 검찰수사 직후 "실제 돈을 준 사람은 따로 있다. 검찰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주장을 제기함에 따라 한 달여 동안 보강수사에 나서 차씨를 추가 기소하게 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차씨와 이 군수 간에 부적절한 돈거래가 있었는지, 이 군수가 금품제공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했으나,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이 군수에 대해서는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교비 불법 전용 대불대 前 총장 집유

학교 돈 수십억원을 불법 전용해 법정 구속된 이경수(79) 전 대불대 총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한주)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승훈(49) 현 총장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전 총장은 학교회계 내의 교비회계에 대해 지출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의 취지를 어겼고, 교비회계에 포함된 돈을 전용해 학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안겼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총장이 설립자로서 대학발전을 위해 노력했고 약 16억원을 학교법인에 출연한 점, 범행 후 교비회계에 보전조치를 취한 점, 고령에 울혈성 심장기능상실 등으로 실형이 집행될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폐쇄 공간 자위행위 강제 추행죄에 해당"

폭행·협박 등 별다른 위협·신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자위 행위를 보여준 경우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한주 부장판사)는 19일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25)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인 A(8)양을 퇴로가 없는 폐쇄된 공간으로 데리고 가 자신의 실력적 지배 아래 둔 뒤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준 것은 강제추행죄에 있어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허위사실 유포 피소 조영택 의원 무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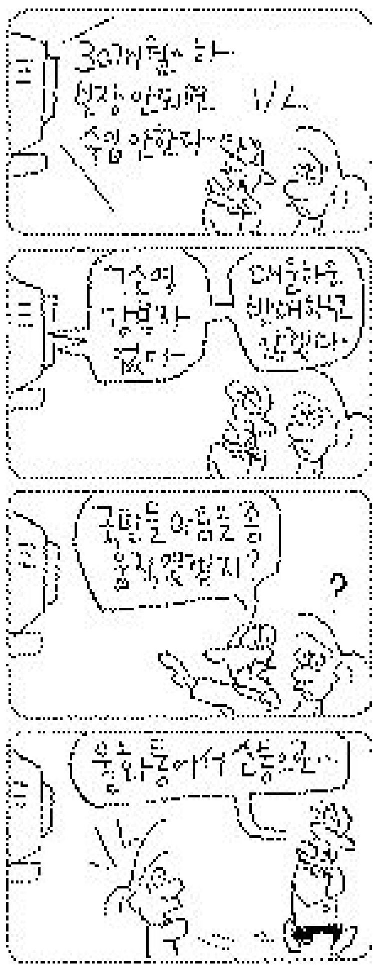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오인서)는 19일 "4·9 총선 당내 경선을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된 통합민주당 조영택(광주 서갑) 의원에 대해 위법 여부를 조사했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3월 당내 여론조사 경선을 앞두고 '판세가 유리하다', '상대 후보가 구태정치를 일삼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 관계자는 "조 의원이 보도자료 작성·배포를 직접 지시하거나 개입했다고 단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원참 〈7535〉 김종두



"음주운전 하지마" 다짜고짜 주먹질

쌍나팔

○…생면부지의 승용차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마라"며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30대 취객이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서행.

○…광주북부경찰은 19일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운전자를 불러내 폭행한 정모(36·북구 용봉동)씨를 폭력행위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8일 밤 9시께 광주시 북구 오치동 한국전력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이모(37)씨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경찰이 20m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왜 하느냐"고 따지며 이씨의 팔과 얼굴 등을 수 차례 때렸다는 것.

○…정씨는 집에 걸어 가던 중 이씨의 차를 발견하고 다짜고짜 행패를 부렸는데, 경찰에서 "이씨가 고급 차에 타 있는 것을 보고 괜한 심술이 났었다"고 횡설수설. /이종행 기자 golee@